유엔의 6·25전쟁 지원과 성격

-신정공세 전후 유엔의 휴전교섭 노력을 중심으로-

양 영 조*

목 차

Ⅰ. 머리말
Ⅱ. 신정공세 직전 유엔의 평화노력과 성격
Ⅲ. 신정공세 직후 유엔의 평화노력과 성격
Ⅳ. 맺음말-유엔의 지원과 성격

Ⅰ.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에서 벗어난 각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45년 10월 24일 51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엔이 창설되었다. 이러한 북한이 남침하자 유엔은 최초로 국제분쟁에 개입하여 북한에 대한 전쟁중지와 침략자 결의안을 가결시키면서 한국을 지원하였다.

유엔은 중공군이 개입한 직후부터는 평화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유엔은 1950년 12월초 이란, 캐나다, 인도 등 대표로 구성된 3인위원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를 결성하여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양측을 설득했다. 그러나 유엔의 휴전방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공산군 지도부는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신정공세(3차 전역, 1950.12.31~1951.1.8)를 통해 전쟁목표를 더욱 확대하고자 했으며, 유엔 참전국과 유엔군지도부는 전쟁지도 노선을 두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갈등과 진통을 겪었다.

본 발표에서는 중공군이 38선을 넘어 공격하는 신정공세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상황으로 나누어 유엔 휴전방안과 그에 대한 양측의 정책적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당시 유엔 회원국들 중 많은 국가들이 중공군의 개입 이후 미국의 정책노선을 지지하지 않거나 또는 비판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이 3인위원회를 결성하여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휴전방안을 마련하려 했다는 것은 국제기구로서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컸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기 유엔의 평화교섭 방안과 양측의 입장을 분석해봄으로써 유엔 성격의 한 단면을 규명하고자 한다.[1)]

1950년 말 유엔군이 전선에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을 포함한 유엔 각국의 지도부에서는 중공군의 참전에 대한 지도노선의 선택을 놓고 많은 이견을 보였고, 때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갈등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판단은 현지 작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엔군은 1950년 12월 초 평양마저 내어주고 급기야는 38도선을 향해 지연전을 펼치며 철수하고 있었다. 이 무렵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

1) James Matray, *Truman's Plan for Victory: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the 38 Parallel Decisio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6, 1979 ; 온창일, 「휴전을 둘러싼 한미관계」, 김철범(편), 『한국전쟁-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 평민사, 1989 ; 서주석, 「한국전쟁 초기 전개과정」, 하영선,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1990, 나남 ; 채용기, 「한국전쟁의 종전과정」, 위와 같음 ; 阪田恭代, 「米國の朝鮮戰爭休戰に關する基本方針の形成」, 軍事史學會編, 『軍事史學』 通卷141號, 2000, 錦正社.

유엔군사령관은 축차 방어전략의 일환으로 38도선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공산군의 진출을 저지하려 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지도부는 새로운 정책목표와 세부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휴전과 확전이라는 상반된 두 입장이 상호 갈등과 보완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2] 이때 미국의 경우 내부적으로 국무부가 군사적 압력과 협상을 통한 안정된 방어선 확보전략을 추진하였고, 미군 지휘부는 한반도에 전쟁을 국한시키지 않고 만주와 중국본토에 대해 전쟁을 확대하되, 유엔군을 일본으로 철수시켜 반격을 위한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신정공세 이후 전황이 역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측이 전쟁을 확대하지 않고 제한 원칙을 유지한 것은 전쟁지도의 방침이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으로 바뀌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즉, 유엔군의 목표가 한반도 통일에서 38선에서의 봉쇄로 축소되고, 그 후 유엔군의 임무는 정치가들이 해결책을 논의하는 동안 전선을 유지하고 적군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렇듯 유엔군 측에서는 정치적 해결책이 새로운 전쟁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공산군 측 전쟁지도부 내부에서도 2차 공세 직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중공군 지휘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에 신정공세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었고, 심지어 중공군사령부는 전력상 38선을 넘어 진격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이며, 유엔의 휴전안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하였다. 결국 중국 정치지도부는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쟁목표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의 평화 제안을 거절하고 중공군 현지지휘관에 남진 명령을 하달하였다.

중공군은 유엔군의 계획된 철수작전으로 인해 무난히 신정공세의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곧이어 유엔군의 반격을 받아 전쟁의 주도권을 다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상), 1990, p.311,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hiefs of Staff, 1978.

시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공산군 측은 이후 유엔 3인위원회가 제안한 것보다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휴전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3)]

본 발표에서는 신정공세 전후 유엔이 제안한 평화방안의 의미와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정공세 이전 유엔군의 한반도 철수 논의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당시 전황과 어떤 관련 속에서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그 시기 유엔이 제시한 정전방안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과연 그것이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신정공세 직후 유엔아 제안한 휴전을 위한 5단계 방안에 대해 미국이 양보하고 중국이 거부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신정공세 직전 유엔의 평화노력과 성격

1. 유엔군의 한반도 철수계획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공세로 청천강 교두보에서 철수하고 있을 무렵인 1950년 12월 4일~8일, 유엔군사령부는 현재의 전황과 관련하여

3) 마오쩌둥은 1951년 6월 13일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군사행동중단의 필요조건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후퇴하게 되었던 것이다. 楊奎松, 「중공군의 정전협상전략」,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540. 여기에 소개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마오쩌둥은 전보에서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문제를 협상의 조건으로 삼지 않아도 좋다"고 하며, "유엔이 이미 침략도구가 되어 중국은 현재로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만문제는 마땅히 조건으로 내걸어 홍정해야 한다. 미국이 대만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려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마땅히 상당한 양보를 하여 먼저 한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여 상당히 후퇴하였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전략 방안을 논의하였다. 당시 맥아더 사령관은 유엔군이 공세에서 방어로 전환하였으나, 공산군에 비하여 병력이 열세하므로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병력의 증원 없이는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유엔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미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의 새로운 방어전략을 승인하였지만, 일정한 선에서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 미 제8군과 제10군단을 통합하여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선을 점령하도록 제안하였다.[4]

그러나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제8군과 제10군단을 통합하더라도 평양-원산선의 노상거리가 약 250km에 달해 전선이 신장되고 종심이 얕아 중공군에게 돌파 포위될 위험이 높으며,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협동작전과 군수지원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별개의 해상병참이 갖는 이점마저 상실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5]

대신 맥아더 장군은 미 제10군단을 함흥에 계속 배치하여 적의 측방을 위협하고 또 이 간격을 통해 대부대의 후방 진출을 저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한 그 작전도 병력의 증강 없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합참은 미 제10군단 운용에 관해 이미 산악기동력의 우수하다고 입증된 중공군에게 도리어 넓은 기동공간만 제공할 따름이라면서 맥아더의 견해에 반대하였다.[6]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미 합참에 제출한 전황보고에 의하면, "이틀간(11.30-12.1)의 사상자가 최초 판단에 의하면 11,000명을 초과하고 있었다. 미 제2사단은 사단병력의 절반에 달하는 6,380명의 손실을 입었고, 터키 여단은 5,000명중 1,000명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현재 아군 병력은 미 제8군과 제10군단을 합하여도 110,000명 정도에 불과하며, 반면 적은 중공군 256,000명과 인민군 100,000명으로 추정

---

4)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1974, p.358,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US Department of Army, USGPO, 1972.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p.279-280.

6) 위의 책.

되는 대병력을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고 하여 아군의 전투력 열세를 지적하였다.[7]

이때 유엔군사령부의 판단은 우세한 병력을 동원한 중공군과의 전쟁에 즈음하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북한인민군에 대응해 왔으나 이제 우세한 병력을 동원한 중공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치적 결심과 군사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하고, 또 병력의 우세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엔군의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1950년 12월 4일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이 위급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도쿄의 유엔군사령부를 방문하여 맥아더 장군과 1차 전략회담을 가졌다. 콜린스는 맥아더에게 현재로서는 대규모 부대를 증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통보하였고, 아울러 현 상황에서 유엔군의 병력 보존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유엔군을 해안 교두보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한다는 맥아더 장군의 판단에 미 합참이 동의하고 있다고 통보하였다.[8]

이어 콜린스 대장은 12월 4일~6일까지 직접 전황을 살피기 위해 한국전선을 방문하였으며 동경으로 복귀한 후 12월 7일 맥아더 장군과 그의 참모, 그리고 해·공군 지원부대장들과 2차 전략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종적으로 미 제8군과 제10군단을 통합한 후 단계별 방어선을 설정하여 지연전을 펼치면서 부산으로 철수한다는데 동의하였다.[9]

유엔군사령부의 철수계획에는 9개의 방어선이 설정되었는데, 서울을

---

7) 위의 책, p.279. 이에 따르면, 12월 1일 현재 미군의 전투병력은 106,747명(육군 6개 사단 82,690명, 해병 제1사단 24,057명)으로 판단되었다. 터키 병력은 4,000명으로 판단되었고, 사상자 판단은 육군 9,083, 해병 제1사단 516명, 터키군 1,000명 등이었다.

8) 위의 책, pp.288-289.

9) Memo, CSA to JCS, 8 Dec 50, 위의 책, p.548 재인용. 여기에 따르면 제8군은 축차적인 방어진지를 거쳐 부산까지 철수하되, 필요하다면 포위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이내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서울을 확보할 시도를 한다는 것이었다.

중점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어선이 설정되었고, 최종적으로 방어해야 할 지역은 개전 초기에 설정되었던 낙동강 선이었다.[10] 맥아더는 이 계획을 12월 8일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5호로 하달하였고, 이 명령에 따라 미 제8군은 평양에서 38도선으로,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은 흥남에서 남동 해안지역으로 각각 철수하게 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서 철수할 무렵 유엔과 유엔 참전국 내부에서는 유엔군의 한반도 철수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유엔군사령부와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 따라 미 제8군의 군사작전도 축차 방어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신임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리지웨이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 제8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부대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다시 공세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나,[11] 당시 작전방침은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철수하는 것이었다. 38도선에서 부산까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9개 방어선에서 지연전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 미 제8군은 유엔군의 작전방침에 따라 38도선 진지에서부터 낙동강방어선까지 축차 방어선을 설정하고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2. 유엔 3인위원회 결성과 휴전방안

1) 유엔참전국들의 입장

중공군이 참전한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대표의 복귀로 인

---

10) 콜린스 장군은 극동군사령부를 방문하는 동안, 9개 축차적인 철수선이 계획된 지도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만, 그의 회고록에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그것마저도 최초 4개선만이 나와 있으며 지명의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음.

11) 김재관(역), 「리지웨이의 한국전쟁」, 정우사, 1984, p.101.

해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유엔 회원국들 중 많은 서방국가들이 미국의 정책에 대해 회의를 갖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서방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이익인 유럽안보를 위해 유엔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와 조건에서 서유럽 국가들을 극동의 전쟁에 개입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기본입장은 전쟁을 확대하지 않고 한반도로 국지화하면서 미국의 군사작전을 충실히 지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영국은 서방국가들이 중국과 전쟁에 휩싸여 서방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련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12]

심지어 영국의 여론은 6·25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영국정부가 유엔 결의를 지지해 한국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물리치는데 일조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공산 측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애틀리 수상은 서방국가들에게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유엔이 극동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가능한 중국정부와 직접 접촉해 중국의 위기감을 해소시켜 줄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13] 그는 미국이 영국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유엔군이 만주지역에 대해 군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엔 참전국들은 유엔의 역할이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현재 국경지역에 한국과 중국 양측의 정당

12) 영국의 대중 정책에 관해서는 김계동, 「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영국의 정책」, 박두복 외,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3) 김계동, 위의 논문, p.379.

한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무렵 유엔이 중국과 협상을 진척시킨 계기는 유엔 폴란드 대표의 정보제공에 의해서였다. 유엔 폴란드 대표는 "압록강 이남지역 60Km 깊이의 완충지대를 북한이 통치하고 미 제7함대가 타이완 해협에서 철수하여 장제스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을 종료한다면,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군대철수를 논의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14]

서방국가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느냐, 아니면 서유럽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해야 하느냐의 정책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영국의 베빈 외상은 한국문제에 더욱 깊이 개입하도록 요구하는 처사는 소련 등 공산주의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경고했다.[15]

2) 공산군 측의 휴전 조건

유엔에서는 1950년 12월 5일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랍 블록 13개국이 중공과 북한에 38도선을 넘지 않도록 요청하는 제의를 하였고 38도선에서의 휴전에 관한 쌍방의 의사를 타진하였다.[16]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동의하였으나 북경과 평양에서는 직접적인 응답이 없었다.

당시 작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공산군 측은 유엔의 제안 이상으로 큰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려 기대하고 있었다. 공산군 측의 입장은 유엔 중국 특별대표 우수츄안을 통해 드러났다. 즉 유엔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와 인도, 영국, 스웨덴 대표 등이 유엔에 머물고 있던 중국 특별 대표에게 군사행동 중지 조건을 타진하자 중국정부가 그 조건을 제시해

14) 위의 논문, p.389.

15) 위의 논문, p.382.

16)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399-1400. 아시아-아랍 13개국은 아프카니스탄, 버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라아, 예멘 등이었다.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유엔을 제한적이나마 대화창구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유엔이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타이완문제 토의를 위해 유엔의 초청을 받아들인 바 있었다. 그들은 자국의 참여 없는 유엔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비난하면서 특별대표를 유엔에 파견해놓고 있었던 것이다.[17]

중국 특별대표의 보고를 받은 외상 저우언라이는 유엔의 문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치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국 특별대표에게 하달할 지침서에 <한국에서의 군사행동의 중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1)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의 철수, 2) 대만해협과 대만지역으로부터 미군 철수, 3) 한국문제의 한국민족에 의한 해결, 4) 중국대표의 유엔 참가와 장개석 정부의 유엔 탈퇴, 5) 일본과의 평화협정 준비를 위한 4대 강국 외무장관 회의 소집 등이었다.[18] 이는 전쟁 이전부터 중국이 주장하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시킨 극동정치에 관한 조건이었다.

이에 앞서 저우언라이는 12월 7일에 주중 소련 대사 로신을 통해 중국의 조건을 소련 정부에 문의하면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당일 스탈린으로부터 답신을 받았다. 즉, 스탈린은 "우리는 한국에서의 군사행동 중지에 관하여 귀하가 제시한 조건들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한 군사행동은 중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첩자국이라 할 수 있는 세 국가의 대표들에게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우리의 계획을 미리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중략) 더욱이 중국의 5개 조건은 미국에 의해 유엔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게 그러

17) 김계동, 앞의 논문, p.380.

18) 외무부(역), 『한국전쟁관련 소련외교문서』 (2), 1994년 공개, p.60(미간행).

한 빌미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19]라고 회신하였다.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은 중국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중국정부도 영국·인도·스웨덴 대표 등 귀측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군사행동이 신속히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중국과 한국에 강요된 군사행동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중국정부는 평화 조건에 관한 유엔과 미국의 입장을 알기를 원하고 있고, 귀국이 유엔이나 미국과는 달리 평화조건에 관하여 이야기 할 권리를 위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한국에서의 군사행동 중지조건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20]

이와 같이 유엔의 의사타진에 관한 중국의 반응은 실질적으로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를 주도하고 있은 소련에 의해 포장되어 나타났으나, 어쨌든 그 조건은 실제 유엔군 측이 수용할 수 없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중국의 전략 목표는, 이미 1950년 12월 4일에 펑더화이에게 전달한 '조선전쟁'의 전개방향에 대한 마오쩌둥의 견해와 의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엔군의 축출에 있었고 휴전도 이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38도선에서 휴전을 모색하려는 유엔의 제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즉, 마오쩌둥은 "적군은 정전을 요구할 것이다. 이때 미 제국주의는 조선에서의 철수를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데, 우선은 38도선 이남까지 철수해야만 우리는 정전회담에 응할 수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평양을 수중에 넣을 뿐만 아니라 서울도 수복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적을 섬멸하는 것이다. 먼저 남조선군을 섬멸시켜야 미 제국주의 철수를 촉진시키는 데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다"[21]라고 하여 내부적으로

19) 외무부, 『한국전쟁 관련 소련 외교문서』 (3), p.127.

20) 위의 자료.

21) 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79.

유엔측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 유엔 3인위원회 제안과 양측의 입장**

공산 측이 유엔의 휴전안을 거부하였으나, 유엔 내 아시아-아랍 위원회는 유엔에서 공산 측을 이해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였다. 아시아-아랍 위원회는 1950년 12월 12일 다시 정식으로 휴전에 중점을 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휴전을 주선할 3인위원회 설치와 평화회의 개최 요구 등 2개의 결의안이었다. 다음날 총회에서 3인위원회 설치안만이 채택되었지만, 그것으로써 유엔은 '선 휴전 후교섭' 원칙을 확인하였다.[22]

3인 위원회 설치안과 평화회의 개최 요구안은 무조건 휴전을 주장하는 미국의 주장을 충족시키면서 중국에게는 보다 광범한 아시아 문제에 대한 고려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양측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중 휴전 결의안은 총회의장인 이란의 엔테잠을 위원장으로 하고 캐나다와 인도 대표를 포함한 3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가 한국 내에서 만족할 만한 휴전이 이루어질 기준을 결정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23]

평화회의 개최 요구안은 비록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정지와 정전 경계선을 설정한 후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집트, 인도, 중국 등) 평화회담 개최를 요구한 것이었다.

한편 미국은 3인위원회가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한 동년 12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내부적으로 휴전을 고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휴전조건을 논의하였다. 그것은 "유엔군에게 군사적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고 정치적 양보를 내포하지 않아야 하며, 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엔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휴전을 수락하기 전에 협상해야

---

22)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524-1525.

23) 정일형, 『유엔과 한국문제』, 신명문화사, 1961, p.31.

한다."는 원칙 하에 구체화되었다.[24]

이때 미국의 입장과 조건은 38선을 휴전의 조건으로 하고 휴전을 위해 다른 문제가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선휴전 후교섭'이라는 원칙을 유엔의 정전안에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유엔의 새 전쟁지도 지침으로서 전쟁의 휴전화 정책이 확정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미 합참도 처음으로 휴전에 관한 군사적 조건을 정식으로 검토하여 동년 12월 13일 <NSC 95>로 회람하였다. 국무부가 이를 간략히 정리하여 동월 15일 정전 3인위원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형태로 휴전조건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전 한반도에서 정전, 38선 부근을 남방경계선으로 한 20마일 폭의 비무장지대의 설치, 부대 병력의 보강과 교대 및 장비 물자의 보충의 금지, 전 한반도에 자유 또는 무제한에 접근 가능한 유엔하의 정전감시위원회의 설치, 일대일 원칙으로 포로교환, 유엔총회가 정전협정을 확인하여 유엔이 조치를 결정하기까지 협정은 유효하다는 것 등을 포함하는 총 8개 항목이었다.[25]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에 들어간 유엔 3인위원회(이란, 캐나다, 인도 등)는 휴전조건에 관한 미국의 조건을 받아내었고, 이어 중국정부에게는 휴전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아랍-아시아 위원회가 마련한 세부계획에 따라 정치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협조를 요청하였다. 즉, 한국전역에서의 군사행동 중지, 38도선에 약 20마일의 비무장지대 설치, 모든 부대는 비무장지대 후방으로 철수, 유엔이 휴전조건 이행을 감시, 모든 병력 및 부대의 교대 또는 증원을 즉시 중지, 포로는 1 : 1의 비율로 교환, 군대의 안전보장, 피난민의 이동, 비무장지대의 통제 등 제반문제의 처리규정 작성 등이었다.

---

24)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517-1520.

25)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528-1531, pp.1549-1550.

그러나 12월 21일 중국의 답신은 중국의 참여가 없이 취해진 유엔의 모든 결의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3인위원회의 제의를 거절하였다.[26] 중국 내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중국의 반응은 매우 복잡했음을 알 수 있다.

펑더화이는 중공군이 계속 38선 이남으로 진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북한 측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저우언라이에게 전보를 보내 유엔의 3인위원회의 정전협정 대안을 거절하는 것에 반대했다.[27] 그러나 마오쩌둥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진격을 정지하고 군대를 휴식시키자는 현지 지휘관의 주장을 지지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38선 이남으로 진공하도록 명령했다.

중국의 휴전거부 의사는 12월 23일에 수신된 저우언라이의 전문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그 내용은 중국이 유엔결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전 3인위원회는 무효이며, '선휴전 후교섭' 방식은 유엔군의 정비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계략이라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저우언라이는 "38선 분계선은 유엔군의 북한 영토 침범에 의해 영원히 무효가 되었다. 중국은 휴전문제를 극동지역 정세와 분리시켜 고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한국에서 외국군의 철수, 한국국민 스스로에 의한 한국문제의 해결, 대만에서 미군의 철수, 그리고 중공대표의 유엔에서의 합법적 지위 승인" 등을 요구하였다.[28] 이는 12월 7일에 중·소간에 합의된 내용을 표명한 것으로서 당시의 유엔의 3인 위원회의 평화 노력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

26) 정일형, 위의 책, pp.31-32.

27) 牛軍, <중국 참전과 국제정치>, p.409.

28)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594-1598.

3. 양측의 정책목표 변경

1) 미국의 전략변경 논의

(1) 미군 지휘부의 전략 논의

중공군의 2차 공세로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지금까지 북한군의 격멸과 북한의 응징을 목표로 전쟁을 지도해 온 유엔군은 새로운 상황에 대비한 지도노선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50년 11월말부터 미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전쟁을 중공으로까지 확대하려는 확전론, 38도선에서의 휴전론, 그리고 강압에 의해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철수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도지침에 관한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은 중공군이라는 새로운 적의 출현에 따른 군사목표 때문이었다. 즉, 북한인민군의 격멸과 한국을 통일된 민주자유국가로 만들겠다는 유엔의 정책목표를 변경시켜야 되느냐? 고수하여야 되느냐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노출되었다.

미 수뇌부들은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의 군사적 의미를 검토한 결과 중공군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설정된 군사목표 즉 "북한인민군의 격멸"이라는 임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맥아더가 그의 공격계획을 포기하고 일정선의 방어진지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맥아더는 그의 공격 계획을 포기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 그는 강력한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완전히 변경되었다고 확인하였지만 임무변경에 관한 어떠한 생각도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미 합참에 통보하였다. 이 무렵 한국정부도 '신전국(新戰局)에 대하여'라는 특별성명을 통하여 확전을 촉구하였다.[29]

중공군의 참전으로 제기된 철군과 확전 논쟁은 1950년 12월 초순 유

29)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1951, pp.c25-c28.

엔의 휴전 노력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이 유엔이 제의를 거부하고 중공군의 공세가 계속되자 철군과 확전 전략 논쟁이 맥아더의 제기로 다시 일게 되었다.[30]

맥아더는 1950년 12월 19일 계속 전세가 악화되자 일본에 4개 방위사단을 증파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당일 열린 국방부 회의에서 미군 지휘부는 일본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맥아더의 요청을 거부하였다.[31] 미군 지휘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저평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미 전략적 재평가 없이 적극적 전쟁정책을 주장한 바 있는 미군지휘부는 마찬가지로 전략적 재평가 없이 기존의 전략적 평가에도 충실하고 자국군의 안전요구에도 부합되는 한반도 철군론을 주장했다.[32]

우선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12월 22일에 대단히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였다. 즉, 전쟁에 미군과 유엔군을 투입하게 된 유엔의 최초지시는 이제 시효가 지났으며 현재 시점에서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중공이 전력증강에 뒤이어 강력한 공격을 가해 그들의 의도가 유엔군을 한국에서 몰아내려는 것이 명확하다면 미국정부 수준에서 가능한 빨리 미군철수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33]

이들은 중공의 침략에 대해 유엔이 추가적인 전력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여 침략 의도를 포기하게 응징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하였지만 당시 국제정세와

30) 채용기, 앞의 논문, p.411. 미군 지휘부의 철수 주장은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전에 대비하여 전열을 정비하자는 것으로 전면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31)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S)* 1950, Vol.Ⅶ, USGPO, 1971, pp.1570-1573.

32) 서주석, 앞의 논문, pp.376-377.

33) 국방부전편위(역), 앞의 책, pp.311-312.

유엔의 분위기로 보아 유엔군의 실질적 증강이나 미군의 추가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군 지휘부는 한반도가 주요 전쟁을 할 장소가 아니라는 정책기조 하에 중공의 참전으로 전면전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계전략상 중공과의 싸움에 나머지 미 지상군을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현 작전부대의 보존을 위해 유엔군의 강제 축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철군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동년 12월 29일 유엔군사령관에게 통보하였다.[34]

즉, 미 합참은 맥아더에게 "한국의 어느 방어선에서 북한과 중공의 침략에 대해 저항하고 또 미군이 큰 손실을 입지 않고 중공의 정치적·군사적 위신을 실추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국가 이익에 대단히 부합할 것이다. 적군에게 가능한 한 큰 손실을 가하면서 부대안전을 주로 고려하는 조건으로 12월 7일자 전문에 설명한 대로 축차적인 진지에서 방어하도록 지시한다. 사태가 우리의 철수를 강요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 대한 위협을 고려하여 군의 질서정연한 철수에 대비, 양호한 기회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금강과 거기로부터 동쪽으로 연한 진지로 철수를 강요당하고 그 후 중공군이 우리를 한국에서 밀어내려는 명백한 가능성을 보이며 방어선으로 대부대를 집중시킨다면 이 조건하에서 일본으로 철수를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35]고 통보하였다.

미 합참은 최종 한반도에서의 철군을 결정하고 맥아더에게 지시를 하달하였지만, 맥아더 장군에게는 그 지시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는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였다. 즉, 그는 다음날(12월 30일) 회신에서, 위의 지시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어를 위한 강력한 확전조치를 요구하

34) 위의 책, pp.315-316.

35) JCS 99935 to CINCFE, 29 Dec 1950, 위의 책, p.556 재인용.

였다.

그는 중공의 전 군사자원이 유엔군과의 전투에 투입되어 만주와 한반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취약하나 기존정책은 이 기회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중공 당국에 의해 전쟁상태가 강요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중공의 해안 봉쇄, 둘째, 중공 공업의 전쟁수행 능력을 해·공군의 폭격으로 파괴, 셋째, 자유중국 부대로 유엔군 증원, 넷째, 자유중국군에게 중국본토에 대한 견제공격의 허용 등이었다.[36]

맥아더 장군은 이 조치를 통하여 유엔군 측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사력의 투입으로써 중국의 침략전쟁 수행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크게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아시아가 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유엔군에 대한 압력이 완화될 것이므로 그때 전쟁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해·공군으로 중공에 대한 작전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근해 도서에 재배치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37]

그는 이러한 방책과 주장이 주요 전쟁을 도발할 것 같다는 이유로 앞서 거부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공이 전쟁에 완전히 개입한 이상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 없다면서 보복조치의 시행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는 소련의 참전여부는 오직 상대적 전력과 능력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소련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4개의 주 방위사단을 극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38]

---

36)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630-1633.

37) 국방부 전편위(역), 앞의 책, p.316.

38) 위의 책.

특히 맥아더 장군은 전략 배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유럽의 안보 현실과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은 동의하지만,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패배하게 되면 유럽지역에서의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극동지역의 현 위기상황에 대한 부대 운용이 국가전략상의 기본개념을 해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결론에서 맥아더 장군은 어쩔 수 없이 철군해야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산 교두보까지 방어선을 남으로 축소해가면서 강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맥아더 장군의 제의 내용은 중국의 공세를 약화시키고 극동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이 계속 장악하기 위해, 중국에 대하여 광범위한 해상봉쇄와 함께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고 중국 본토 및 한반도 지역에서 대만군을 사용함으로써 전면적인 보복을 감행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합참은 맥아더 장군에게 "적절한 방어선에서 효과적인 저항으로 적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되, 불가피할 경우 귀관의 판단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39]

(2) 미 국무부의 원상회복 전략

1950년 11월 28일자 맥아더는 "중공군 20여만의 대거 개입으로 유엔군의 최종공세는 완전히 실패하였고, 적은 한반도에서 모든 유엔군을 축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에 근거하여 미 정군(政軍) 연석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국참전에 의해 대소 전면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전제하고 기존대로 대소 전면전쟁의 경우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따라서 철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40]

대체로 군 지휘부에서는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전선을 유지할 능력에

---

39)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630-1633.

40)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246-1247.

대해 비관적이고 또 조기철군을 바라고 있었지만,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과 유엔의 위신 등 정치적인 이유를 중시하여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전선을 유지해야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41] 이에 국무부는 국방부, 합참 등과 협의하면서 조기 전쟁종결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38선에서의 휴전과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최초의 목표에 기초하는 정치적 타결책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1950년 11월 29일 애치슨 국무장관의 정책발표에서 확인된다. 즉, 그는 중국의 개입을 비난하고, 앞으로 미국은 1) 유엔에 대한지지, 2) 지역안전보장기구의 발족, 3) 동맹국과 협력하여 군사력 증강, 4) 경제협력, 5) 공정한 교섭의 준비, 6) 도의적 가치 등 6개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42] 이어 다음날 11월 30일 미 합참은 "유엔군의 안정상 필요하다면 한반도의 북반부 지역을 포기할 수 있다"고 북한지역 포기 승인을 공식적으로 하달함으로서 지금까지의 정치적 전쟁목표였던 '한반도 통일 계획'을 무효화하였다.[43]

국무부의 입장은 12월 1일 러스크가 애치슨에게 보낸 메모에 의하면, 차후 미국의 군사 정치적 목표와 관심은 1) 공산주의 침략의 성공을 저지하는 것, 2) 중소와의 전면전쟁을 회피하도록 분쟁을 국지화하는 것, 3)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유엔 하에 한반도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여 미군을 철퇴하는 것, 4) 주요동맹국과의 공동보조와 유엔에서의 다수의 지지를 견지하는 것 등으로 정리되었다.[44]

국무부는 새로운 전략을 실현할 방책으로 전선의 안정화시켜야 하며 '유엔 하의 정전'의 가능성과 그 조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제안하였

41) 위의 자료.

42) US Dep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Dec 18, 50, 阪田恭代, 앞의 논문, pp.37-38 재인용.

43)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1260.

44)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281-1282.

다. 즉, 공산군 측에 의해 휴전이 받아들여지면 그 이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교섭방안도 이어질 것이며, 만족할만한 조건에서조차 휴전이 거부될 경우 또는 철퇴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봉쇄와 만주공격 등을 포함한 가능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45]

휴전선으로서 38선이 적합한 지 여부의 문제는 1950년 12월 1일 펜타곤 정군지도자 회의에서 거론되었다. 애치슨은 전선의 안정화를 위해 휴전을 받아들이고 38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육군총장 콜린스와 합참의장 브레들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46] 마샬 국방장관도 12월 3일 회의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38선의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그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중공군이 휴전을 거부하고 38선을 돌파할 경우, 중국을 침략자로 선언하고 중국이 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또 38선이 휴전교섭의 최저조건이며 그 이외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47]

미국의 정군 지도자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일정부분 정책적 합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정군지도자 회의 직후인 12월 4일~8일 예정된 트루먼-애틀리 영수회담에 대비한 정책문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이 문서는 12월 3일 국무부가 초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와 합참의 의견이 반영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이었다.

즉, 동 문서에는 첫째, 38선 부근에서의 휴전과 비무장지대 설치를 명기하였으며, 둘째, 휴전이 받아들여지면 한반도 문제는 정치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셋째, 중국이 휴전을 거부하고 38선을

45)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1282.

46)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1331.

47)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323-1334.

돌파할 경우, 유엔군은 어디까지나 군사적 필요로부터 철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압력행사에 관해서는 국무부가 합참보다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무부는 중국을 침략자로서 선고하기로 상정했지만,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대륙에서 전쟁에 휩싸이는 것은 대소정책상 유리하지 않으며, 중국국내 반공운동, 국부군 활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48] 여기에 합참이 해안봉쇄와 보급선의 폭격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방침은 1950년 12월 4일 트루먼-애틀리 영수회담에서 논의되었다.[49] 이 회담은 트루먼의 핵무기 발언이 빌미가 되어 계획된 것이었으나, 이 회담에서 유엔군의 새로운 전략 전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트루먼의 핵무기 발언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유엔 참전국들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에서 돌출된 것이었다.

전쟁초기부터 미국은 중공의 참전에 대한 새 대응전략의 하나로 핵무기 사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미국은 미 지상군을 투입한 1950년 7월 초순부터 한국전쟁에 핵무기 운용계획을 검토 발전시켜 왔으며, 10월과 11월 말 중공군의 공세로 유엔군이 위기에 처하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미 국방부는 유엔군이 재앙에 직면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건의하고 언제 인가될지라도 이를 신속히 운용할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극동군사령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지상군 근접지원 핵무기 긴급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발사준비를 추진하였다. 극비리에 추진되어 온 핵무기 운용계획은 유엔군의 철수방침이 정해진 이튿날인 1950년 11월 30일에 트루먼이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직접 시사함으로써 표출되고 현안으로 부상되었다.[50]

---

48)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348-1349.

49)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1371.

트루먼은 기자회견에서, 유엔군 파견국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회견 벽두에, "유엔군은 한국에서 임무를 포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 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뒤따른 기자 질문에서 "미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의 사용을 포함하여 군사상황에 대처할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다.(중략)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늘 적극적으로 고려해 왔다" 라고 답변하였다.[51] 이 발언은 곧장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트루먼-애틀리 회담에서 핵무기 사용문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전략전반에 걸쳐 논의되었다. 양국 정상은 핵무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영국과의 협의 없이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한 선에서 조절하였다. 또 철군문제에 관하여 유엔군의 자발적 철수는 고려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으나, 강압에 의한 철수의 경우 미국은 유엔에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등 군사, 정치,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영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52]

양측은 유엔의 권위와 위신의 신장, 전면전을 회피해야 한다는 중요성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였다. 우선 양측은 극동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 휴전을 추구할 때가 왔다는 데에는 합의하였으나 적대행위 종식의 대가로서 미국은 조건 없는 휴전을, 영국은 대만문제의 양보와 중공의 유엔 가입을 주장하다가 전자(대만 문제의 양보 주장)를 포기하는 대신 후자(유엔 가입)를 계속 지지하였다.[53]

---

50) 국방부 전편위(역), 앞의 책, p.273.

51) Harry S. Truman, *Years and Trial and Hope*, 1956, pp.395-396. 여기에 의하면 기자회견에 관한 내용과 핵무기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연설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었는가는 보여준다.

52)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1451.

53)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최종적으로 영미회담의 결과는 12월 8일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 있어서 유엔의 목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해 달성하고 자유 또는 독립조선에 기초한 조선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54]고 발표되었고, 무력에 의한 통일의 실현은 실질적으로 부정되고 원상회복에 중점이 두어졌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전쟁을 전쟁 이전의 경계선인 38도선을 토대로 종결짓겠다는 합의였다. 물론 여기에는 중공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양보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했지만, 38선에서의 정전이 앞으로 유엔군 측 전쟁지도 노선의 대원칙이 되었다.[55] 이로써 유엔의 '6.28 대한민국 지원결의'와 '10월 7일 통한 결의'를 토대로 북한의 침략에 대한 응징과 그 연장선에서 군사작전을 통해 추진하던 민족통일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통일은 오직 휴전 후 정치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상에서처럼 미국정부는 소련을 의식하여 중국과의 전쟁에 너무 깊이 말려들어서는 안 되고 또한 유엔이 한국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며 일본의 방위를 위해 주한미군의 병력과 부대를 큰 손실 없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새 전략수립의 핵심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미 국무부는 중공의 침략에 대한 대처 방안도 반드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치를 통해 강구되어야 하며 서방 유엔회원국의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확전이나 철수보다는 유엔주도하에 38도선에서 휴전을 이루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결정하였다.[56]

---

pp.1365-1366. 영국의 기본입장은 어느 정도 정치적 양보를 하더라도 중국과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하였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완고한 입장이었다.

54)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486-1488.

55) 국방부 전편위(역), 앞의 책, pp.291-299.

56)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410-1411.

2) 중국의 전략목표 변경

유엔군 측은 극비리에 대한민국 정부의 이전계획과 유엔군의 철수계획까지 수립해두고 중공군의 기도와 전선 상황의 추이에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엔군 측의 적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판단과는 달리, 중국자료에 의하면, 이무렵 중공군은 유엔군을 더 남쪽으로 밀어낼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 측의 후퇴를 철군의 징후로 보지 않고 자신들을 유인 격멸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신정공세를 추격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스스로 멈추었음을 알 수 있다.[57]

이에 따르면 중공군의 제1·2차 공세에 투입된 총 30개 사단 중 2차로 투입된 제9병단(3개 군, 12개 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입은 손실로 인하여 함흥 부근에서 재편성 중에 있어 신정공세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로 투입되어 38도선까지 진출한 제13병단(6개 군, 18개 사단)은 2차에 걸친 동계공세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약 23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탄약 및 보급이 바닥을 들어낸 실정이었다. 인민군은 3개 군단 약 75,000명이 전방으로 전개하였으나 미처 재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58]

그리하여 중공군은 신정공세 작전계획 수립단계에서 38선 돌파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중국 정치지도부와 격론을 벌였으며 또 작전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남진강행 문제를 놓고 북한 지도부 및 소련 군사고문단 등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최초 중공군 지휘관들은 2차 공세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인 12월 8일 마오쩌둥에게 38선을 넘지 말고 충분히 준비를 한 후에 내년 봄 다시 전투를 재개하자고 제안하였다. 펑더화이는 "적을 섬멸하지 못하

57) 중국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부, 『항미원조전사』 제2권, 군사과학출판사, 2000, pp.188-189 ; 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세경사, 1991, p.94.

58) 전략문제연구소(역), 위의 책, p.93.

면 다시 38선에서 작전을 종료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후일을 도모하겠습니다."라고 건의하였다.[59]

그동안의 전투에서 볼 때 중국군이 절대 우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병력들이 대단히 지쳐있으며 보급 부족, 병참선 신장 등으로 2~3개월간의 휴식과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60] 펑더화이의 건의를 검토한 저우언라이도 그의 견해에 동의하여 "서울진격을 내년 3월까지 미루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병을 배치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공중출격이 가능합니다."라고 의견을 첨부하여 마오쩌둥을 설득하였다.[61]

그러나 마오쩌둥은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38선을 돌파해야 하며, 1951년 1월 15일 이전까지 완수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마오쩌둥은 1, 2차 전역을 높게 평가하여 미군 축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이번 기회는 아군이 대거 적을 섬멸해 조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이다"라고 하였다.[62] 그는 초기 작전목표를 확대하여 38선 돌파와 서울 점령을 달성하도록 결정하였던 것이고,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장기적인 지구전 전략을 허용치 않았던 것이다.

이 무렵 김일성도 12월 하순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정공세의 작전방침을 하달하였다. 그는 "적이 38도선 방어를 강화하기 전에 전선 동부의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적 방어가 약한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침투한 후 후방에 강력한 제2전선을 깊숙이 형성토록 하였다. 그리고 중

---

59) 「펑더화이가 중앙군사위원회에게」(50.12.19),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II, p.103 ; 『抗美援朝戰爭史』 제2卷, p.163.

60) 『抗美援朝戰爭史』 제2卷, p.165.

61) 沙江, 「항미원조전쟁의 군사목표와 전쟁지휘」,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II, p.324.

62) 杜平, 1989 『在支援軍總部』, 解放軍出版社, 142쪽 ;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p.99쪽 ; 「마오쩌둥이 펑더화이에게 (50.11.28),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II, p.84.

서부전선의 중공군이 주저항선을 돌파하면 이들과 연결작전을 실시하여 포위망을 구축한 후 적을 섬멸토록"하였다.[63]

평더화이는 현지사령관으로서 어려움을 깊이 절감하여 1950년 12월 19일 중앙군위에 "내가 보기에는 조선전쟁은 상당히 장기적이고 힘들 것이다. 미군은 한두 차례 패한다 할지라도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군은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공격방침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여 현실적인 작전방침을 재차 건의하였다.[64] 그는 현재의 전력으로는 중국군이 대승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전수행조차 어렵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소련과 북한 측의 요청-특히 스탈린의 입장-를 고려하여 재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38선을 돌파하여 유엔군을 대량 살상하고 나아가 조기에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결심을 전달하였다. 평더화이는 2차 전역 이후 병력의 상당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휴정(休整)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65]

평더화이는 어쩔 수 없이 마오쩌둥의 정치적 결정과 전선에서의 군사상황을 동시에 고려하여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이때의 방침은 38선을 돌파한 후 정황을 파악한 후 주둔을 결정하고 38선 이북으로 후퇴할 필요가 있으면 철수한다는 것이고, 적을 추격하여 남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66] 마오쩌둥은 12월 21일 평더화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전역이 끝난 후 전군 주력은 휴식과 정비에 유리한 지역까지 철수하여 한두 달 휴정해야 한다"고 하여,[67] 장거리 추격이나 전면 공격을

63)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제26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248.

64) 沙江, 앞의 논문, 325쪽 ; 杜平, 『在支援軍總部』, p.152.

65) 『抗美援朝戰爭史』 제2卷, 165쪽 ; 彭德懷,, 『彭德懷自述』, p.192.

66) 牛軍, 「중국군의 38도선 남진 배경」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p.484~485.

67) 沙江, 「항미원조전쟁의 군사목표와 전쟁지휘」,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II, p.325.

강요하지는 않았다.

공세 개시 이틀 전에 마오쩌둥은 전문에서, "우리는 적군이 서울과 37도선 이북구역을 사수하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그들이 이 전선에서 물러나 대구, 부산 등 협소한 지역으로 철수할 경우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펑더화이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68]

이상에서처럼 중국지도부는 1950년 12월 중순까지 북한이 잃었던 38도선 북쪽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전쟁목표를 더욱 확대하여 38선 이남으로 공격할 것을 결정하였다. 중국군의 신정공세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임무를 모두 완수하도록 한 것이었다.

Ⅲ. 신정공세 직후 유엔의 평화노력과 성격

1. 신정공세와 양측의 전력 상황

중공군은 1950년 말 신정공세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아군을 38도선에서 격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인민군 제1군단을 개성, 제13병단 예하의 중공 제50군을 금천, 제39군을 구화리, 제40군을 삭령, 제38군을 연천, 제42군을 철원, 제66군을 화천, 그리고 인민군 제2·제5군단을 양구-인제로 진출시켜 공격을 준비토록 하였다.[69]

미 제8군이 평양에서 38도선으로 철수하는 동안 곡산-이천 일대에서 유격전을 펼치던 인민군 패잔병들로 구성되었던 부대들도 인민군 제2

68) 「마오쩌둥이 펑더화이와 고강에게」(1950.12.29),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508.

69) 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부(편), 앞의 책 제2권, p.174 ; 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pp.68-69.

군단에 편입되어 연천, 춘천, 화천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로써 중동부 전선 일대에 집결된 인민군은 약 65.000명으로 추산되었다.[70]

서부전선으로 진출중인 중공군은 청천강- 평양축선에서는 유엔 공군에 의하여 남하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12월 중순이후 부터 아군의 항공폭격을 피하기 위하여 엄폐와 위장을 하고, 또한 주간 이동을 중지함으로써 한동안 접적이 단절되었다. 그러나 하순에 접어들면서부터 항공관측과 첩보기관에 의하여 평양에서 동남쪽으로 이동 중인 중공군의 병력과 보급품을 실은 차량이 수차례 관측되었다. 이는 중공군의 새로운 공세가 임박하였음을 예고하는 징후였다.[71]

미 제8군의 정보부서들은 적의 가용병력이 17만 4천여 명 정도라고만 판단하였을 뿐 그들의 정확한 기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8군사령관은 전방사단에 정찰대를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 적의 위치와 규모를 탐지토록 명령하였고, 4일간의 전선시찰을 통하여 적의 공세가 아군의 경계가 느슨해질 연초에 시작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72] 또 아군의 항공정찰대는 적의 대규모 포병진지가 주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제1, 제9군단의 전투지경선인 연천-의정부 도로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었고, 또 임진강변에서 다량의 교량용 물자들이 비축되어 있는 것도 관측하였다.[73]

중공군은 2차에 걸친 공세작전으로 입은 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공에서 고참병 8만 4천 명을 차출하여 전선부대에 보충하였고, 보급수송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의선(정주-맹중리), 만포선(회천-개천)의 일부 철도도 긴급 복구하였다.[74]

---

7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166.

71) 위와 같음.

72) 국방부 전편위(역), 앞의 책, p.291, p.300, 305.

73)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193.

74) 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77 ;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1994, pp.122-124.

공격준비가 완료되자 조중연합군사령관 펑더화이는 인민군 3개 군단과 중공군 6개 군의 협동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중인 38도선을 돌파하고, 임진강 동쪽과 북한강 서쪽에 배치된 국군 제1, 제2, 제5, 제6사단의 일부를 섬멸토록 하였다. 그리고 상황이 순조롭게 전개된다면 계속 공격하여 신속하게 서울과 춘천, 홍천, 양양, 강릉일대를 점령한 후 휴식과 재정비를 진행하면서 춘계공세를 준비하기로 작전방침을 정하였다.[75]

정찰과 도하준비를 완료한 적은 기습을 달성하기 위하여 1950년의 마지막 날을 공격 개시일로 결정하고, 이날 17:00에 약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12월 중순이후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던 한반도의 38도선은 다시 격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중공군이 신정공세를 전개하기 직전인 1950년 12월초 서울 교두보선을 최후의 결전장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군의 사기를 고려하여 큰 손실을 입지 않고도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전토록 지시하였다. 유엔군이 서울에서 철수하였지만, 미제8군사령관은 미 합참에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아군이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긴 하였으나 미군은 아직 중공군을 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당시 리지웨이 장군은 "중공군은 단지 수적으로만 우세할 뿐 무기체계에서는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매우 열등하다. 그리고 항공지원 능력도 없고, 빈약한 통신장비와 소수의 기갑 차량을 갖고 있을 뿐이다"라고 평가하였다.[76]

펑더화이는 12월 31일 신정공세를 개시하여 한강 남쪽으로 유엔군을

---

75) 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p.82

76)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199.

추격하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유엔군의 대량 섬멸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공산군 유엔군이 평택-안성-제천-삼척선으로 물러나자 공산군을 유인하기 위한 철수작전이라고 판단하고 1951년 1월 8일 신정공세를 종료하였다.[77]

선정공세가 종료된 직후 펑더화이는 공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즉, 그는 "1951년 1월 8일까지의 작전에서 아군은 이미 적군을 37도선 부근의 평택-안성-제천-삼척선까지 축출하였다. 아군의 공격간에 적군의 병력을 대량으로 섬멸하지 못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적군은 계획적으로 철수작전을 실시해서 아군을 깊숙한 곳까지 유인한 후 아군의 측후방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려는 기도를 품은 것 같아 너무 멀리 전진하여 적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막고 앞으로의 작전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추격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였다.[78]

공산군 측은 추가적인 증원 없이는 유엔군을 밀어낼 여력이 없었으며 일단 38선 이남, 서울까지 진출하여 정치 군사 심리적 이점을 확보하고 춘계공세를 준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당시로서는 유엔군의 철수를 인천상륙과 같은 상륙작전으로 자신들을 포위하기 위한 유인전략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의 진출을 유보하였다. 이때 마오쩌둥은 "수원-홍천선에서 공세를 중단하고 부대정비를 할 것"이란 사실을 스탈린에게 알렸으며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2~3개월 내에 결정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79]

중공군은 유엔군을 대전, 대구로 계속 추격하면 전쟁 초기 북한군이

---

77) 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92. 중공군은 이번 신정공세에서 30여만 명(중공군 6개 군 23만여 명과 인민군 3개 군단 7만여 명)을 투입하여 서울을 재점령하고, 37도선 부근으로 진출하였으나 인민군 2,700명을 포함하여 85,000여 명이 전사하였다.

78) 위의 책, p.92. 공산군측은 신정공세 기간 공산군 전사자를 8,500명(인민군 2,700명 포함)으로 밝히고 있다.

79)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50.1.4), 김광린(역), 앞의 책, 133~134쪽 ; 위의 책, p.327.

낙동강전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공군의 병참선이 신장되어 오히려 위기에 봉착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추격을 중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리지웨이 장군이 지적하였듯이 중공군의 공격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 것이었고, 서울 교두보선에서 마치 훈련하듯 계획된 철수를 실시한 유엔군은 곧이어 반격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80]

결과적으로 중국군은 신정공세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국군은 그것이 자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전투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평더화이는 서울을 점령한 후 전과에 대해 지나치게 선전하지 않도록 통제하였고, 소련장비의 투입 시기에 대해 재삼 확인하고 다음 전역에 관해 중앙군위와 협의하였다.[81]

2. 유엔의 5단계 휴전방안과 양측의 반응

유엔의 휴전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공군과 북한군이 1951년 12월 31일 38선을 넘어 공격하자, 유엔 3인위원회는 이 시점에서 휴전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나 건의도 무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의견을 유엔총회에 보고하였다. 미국은 종래의 6개국 결의에 대신할 새로운 침략자결의의 채택을 결단하고 외교적인 압력행사의 방향으로 진행시켰다.[82]

그러나 영국 등 6개국 결의국과 인도, 캐나다가 협상의 가능성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미국은 중국의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침

80) 국방부 전편위(역), 앞의 책, pp.321-323. 중공군 신정공세시 동부전선에 배치된 국군은 집중적인 공세를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유엔군은 전선조정을 위해 불가불 D방어선(평택-안성-장호원-원주-원포리)까지 철수하게 되었다.

81) 解方, 『關于朝鮮開城停戰談判的回憶』,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II, p.215.

82)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VII, pp.6-9.

략자 결의안 제출을 일시 연기했다.[83]

유엔 3인위원회는 중공군의 신정공세가 끝난 후 1월 11일 북경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평화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의 5단계를 거쳐 극동의 평화를 수립하도록 다시 제안하였다. 이 5단계 평화안의 핵심은 1) 한국전쟁의 즉각 휴전, 2)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모색, 3) 한국으로부터 군사력의 철수와 더불어 한국국민이 자신들의 정부에 관한 희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 마련, 4) 한국의 통일 및 그곳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유지를 위한 잠정협정 체결, 5) 극동문제, 대만의 지위, 중국의 유엔 대표권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영국·소련·중국 대표를 포함한 적절한 기구의 설치 등이었다.[84]

이것은 극동문제 해결을 위해 영 연방국이 중심이 된 유엔 3인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를 최종적으로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정치문제를 포함하는 유엔의 5단계 평화안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단이었다.[85] 이 제안은 1951년 1월 13일, 미국이 지지하고 소련이 반대하는 가운데 유엔 정치위원회와 그 후 총회를 통과하였고 중공에 통고되었다.

현지 지휘관인 펑더화이는 유엔의 제의를 적어도 전략상 이용할 수

---

83)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30-131.

84)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95-96.

85) Harry S. Truman, ibid., pp.2-3. 1951.1.19일 및 23일에 미 의회에서 중국을 침략자로서 선고해야한다고 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1950년 12월말부터 51년 1월초에 걸쳐 유엔군의 철퇴 등을 상정하여 합동참모본부는 대중국 군사 보복조치에 관해 검토하여 잠정적 방침으로서 1월 12일 NSC 101을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자국의 목적이 아시아 근해의 방위선을 유지하고 대만을 방어하며 실행 가능한 한 남한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소 전면전을 회피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09-110.

있는 기회로 평가하였고, 11일 곧바로 중국과 북한 양국이 한시적이라도 정전을 지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86] 그러나 마오쩌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홍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미군의 반격이 개시되자 28일부로 공격을 명령하였다. 자신감에 차있던 마오쩌둥은 군사적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은 소련의 기대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87]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중국은 무조건적인 휴전이 미국에게 차후 도발을 위한 빌미를 주는 것이라 거부하였고 1월 17일에 정치적 협상이 없는 휴전은 수락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협상의 대가로서 중국의 유엔가입, 대만으로부터 미군의 철수 등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대안을 제출하였다. 저우언라이는 정전 이전에 먼저 교섭하자고 요구하였다.

중국의 거부는 이미 소련이 1월 11일 유엔에서 3인위원회의 건의안을 반대했으므로 다른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마오쩌둥은 건의안을 반대한 이유를 신정공세가 끝난 후 조선전체를 해방한다는 작전목표를 제출한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88] 소련은 미군의 전력소모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므로 중국군에 무기를 지원하고 마오와 펑더화이를 독려하여 현재 제기된 유엔의 5단계 평화방안을 중국이 거부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소련의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에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중국이 유엔제안을 완전히 거부했다고 선언하고 중국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도록 방향을 진행시켰다.[89] 미국은 중공에 대한 침략자 결의 채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86) 「펑더화이가 마오쩌둥에게」(51.1.27),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II, p.327. 재인용.

87) 楊奎松, 앞의 논문, p.603.

88) 牛軍, 앞의 논문, p.410.

89) 서주석, 앞의 논문, p.375.

제시된 침략자 결의 내용은 1)유엔이 단결하여 중국의 침략을 사실로 인정, 2)중국의 군사적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경제적인 규제, 3)유엔과 미국이 평화적인 해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등으로 정리되었다.[90]

1951년 1월 20일 유엔 미국대표 오스틴은 유엔총회에 침략자 결의안을 정식으로 상정하였다. 영국과 서구동맹국은 침략자 결의안의 '집단적 조치'가 맥아더에게 새로운 전쟁확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91] 그러나 침략자 결의 내용은 군사적 조치라기보다는 경제적 조치였다. 국무부는 결의안에 대해 국방부와 토의한 후 1월 29일 일부 수정하였다. 최종 결의안은 2월 1일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때 영국과 캐나다는 찬성하였으나 인도가 반대하였다.[92]

이제 미국은 중국이 유엔의 제의를 거부한 이상 침략자 결의의 채택에 보다 외교 면에서 중국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교섭에 있어 유리한 입장을 확보했다. 여기서 미국이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로 전환한 것은 당시 군사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측면이 있었다. 1951년 1월 중순 안정화된 전선으로 미국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자국군의 안전을 위한 즉각 휴전 제의의 필요를 기초부터 허물고 만 것이다.[93]

결국 미국으로서는 중공이 휴전안에 반대함은 물론 계속 공세를 취함으로써 그들의 의도가 한국에서 유엔군을 구축하겠다고 되풀이한 위협의 실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과 아울러 유엔에 대한 도전을 멈추려는 위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유엔회원국에게 이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지난 12월 16일에 국가

90)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33-151.

91)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Ⅶ, p.9.

92)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117, p.130.

93) 서주석, 앞의 논문, p.376.

비상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이해 1월 20일에는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였으며 이는 2월 1일 총회를 통과하였다.[94] 이로써 중공군의 참전과 더불어 추진된 유엔에서의 휴전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3. 미국의 현상유지 정책 확정

미국 내부의 전쟁지도 노선의 갈등은 적의 신정공세 기간 중에 속개된 합동참모회의와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하여 유엔군 측이 취할 군사적 방책과 정치적 지도지침을 확정함으로서 일단락되었으며, 1951년 1월 12일의 전문 지시에 이어 15일에는 콜린스, 셔만의 두 합동참모가 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쿄와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다.[95]

우선 맥아더 장군이 요청한 보복조치에 관하여, 신중을 요한다는 전제하에, 해안봉쇄는 전선이 안정되던가 철군을 완료하였을 때의 상황에 따라 시행하며, 중국 본토의 폭격은 중공이 한반도 외부로부터 유엔군을 공격할 경우에 승인 할 수 있고, 자유중국군의 유엔군에 편성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그의 운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채택이 곤란하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고, 다만 자유중국군의 작전제한 제거안만 수용되어 공산권 작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군수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추가적 병력증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방어선이 안정될 경우 2개의 주 방위사단을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일본으로 전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목적은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부대로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미 정책 당국의 결정은 NSC 101과 101/1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

94) 위의 책, p.336.

95) 국방부전편위(역), 앞의 책, pp.318-319.

이는 자국의 목적이 아시아 근해의 방위선을 유지하고 대만을 방어하며 실행 가능한 한 남한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소 전면전을 회피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조치로서 한국전선의 안정 또는 일본으로의 철수, 극동주둔 미 지상군의 병력 제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준비 및 한국으로부터의 증강, 대중국 경제봉쇄 및 해안봉쇄 준비, 중국 해안과 만주의 공중정찰, 대만에 대한 원조증대, 대만군 작전제한 철폐 및 게릴라 지원,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중국 도발 시 대중국 폭격, 기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원조 강화 등을 들고 있다.[96]

특히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본토에 대한 직접적 군사조치의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군사력이 건설될 때까지 적대행위 지역의 확대에 관한 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고 한국전쟁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일지라도 그로 인해 일본이나 서유럽이 대규모 적대행위에 말려든다면 결코 이롭지 못하다"[97]라고 경고하였다.

결국 확전전략 논쟁은 실제 전황을 확인하고 돌아온 양군 참모총장이 전황의 호전과 함께 철군 위기가 종식되었음을 보고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전선을 직접 방문하여 위력정찰전을 지켜 본 콜린스와 반덴버그 장군 일행은 한반도에 남아 싸우는 것은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98] 이로써 유엔군이 다시 반격을 본격화하고 38선을 목표

---

96)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70, pp.79-81.

97)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68-70.

98)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02-105 ; 국방부 전편위(역), 앞의 책, pp.336-342. 콜린스와 반덴버그 두 장군의 전선시찰 결과는 국방장관, 대통령에 각각 보고되었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그 시찰 결과는 "현재 제8군과 한국군에 관하여 걱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것으로 요약되었고, 트루먼 대통령도 그 보고를 받고 안심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유엔군측은 전전현상에서 전쟁을 종결한다는 정책지침을 이행하고 있었으며, 우선 38선까지 진출하고 또 적에게 선택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약 2~3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로 진출하였고, 미국은 자신의 조건에 기초하여 휴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전선 상황이 최악의 경우 한국 망명정부를 유지하여 저항을 계속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었다. 즉, 1951년 1월 12일 미국 정부가 중공군의 참전과 관련하여 결정한 유엔군의 전쟁지도지침에는, 강압에 의한 철수시 유엔군은 일단 일본으로 철수하되, 한국 정부와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 정부로 하여금 제주도에 망명정부를 설치하고 본토수복을 위해 저항을 계속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99]

이는 유엔군사령부가 수립한 초기의 철군계획(1950.12.6)에서부터 고려되었으며 1951년 1월 12일의 정책결정에 따라 1월 15~19일 콜린스, 반덴버그 장군의 도쿄 방문 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다. 그러나 철군계획 자체가 철저한 보안 하에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도 비밀에 부쳐져 전혀 노출되지 않은 채 워싱턴과 도쿄에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이 계획의 초기, 군사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불가피하게 미군이 떠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로 의사 타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00]

즉, 최초 1950년 12월 6일 맥아더 장군이 어쩌면 유엔군이 한국에서 떠날지도 모른다는 전황보고를 해왔다는 보도에 접한 장면 대사가 미국무부에 들어가 "유엔군이 중공군을 격퇴하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경우엔 한국국민은 죽어버릴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국무부에서는 "미국은 한국전쟁을 포기하거나 군사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철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 다음, "그러나 최악의 경우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야 할 경우,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국

99) 국방부 전편위(역), 앞의 책, p.329.

100) 위의 책, pp.336-342.

망명정부 수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대사가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다"고 하였다.[101]

물론 이 의사타진은 본국으로 전달되었다. 당시 미국이 극비리에 추진한 이 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법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외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한다."라고 전제하고 그 대상 인원을 행정부관리와 그 가족 36,000명, 한국 육군 260,000명, 경찰 60,000명, 공무원, 군인 및 경찰 가족 400,000명을 포함하고 기타 요원을 고려해 도합 100만 명으로 판단하여 수송계획까지 발전시켰다.[102] 망명정부 위치는 제주도를 적지로 결정하였으나 이곳에는 이미 25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과 포로가 수용되어 있어 식수가 부족하여 추가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곳에 수용된 포로들을 먼저 근해도서로 이송하기로 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동시키지는 않기로 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계획의 검토 과정에서 "한국인의 철수와 관련된 재반 문제는 유엔(회원국)과 협의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철수 장소, 급식문제, 의료지원을 비롯해 최종적 처리문제는 수년간 계속될 문제들이다. 이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하여는 유엔군의 철군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유엔군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중공군의 신장된 병참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교두보(낙동강 방어선)를 상당기간 확보할 수 있다"[103]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철군 시 한

---

101)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386-1387 ; 한표옥, 『한미 외교 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pp. 126-127 ; 「미 극동군 한국정부 제주도 이전 검토 보고서」, 『월간조선』 1996년 1월호 부록, pp.114-116. 미국은 중공군의 압력에 이해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될 경우 한국정부와 국군의 처리에 관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발전시켰으며, 이 극동군 보고서는 그 중의 하나로서 1951.1.18~19일 미국의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이 극동군사령부에서 맥아더 장군과 그 계획을 검토하고 상부로 보고한 것이다.

102) 「미 극동군 한국정부제주도 이전 검토 보고서」,앞의 책, p.116.

103) 「미 극동군 한국정부제주도 이전 검토 보고서」,앞의 책, p.116.

국 국민의 처리는 유엔으로서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철군여부의 결정은 정치적 결단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1·4후퇴'는 한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은 기로였으며 운명을 결정할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다. 유엔군 측 지도부는 철군계획을 'Top Secret'로 유지하고 미군과 유엔군의 철군계획과 한국 정부와 군경의 도서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후 전면전이라는 우발상황에 대비한 유엔군의 재배치 계획과 한국정부와 군·경의 다음 단계의 이동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철군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략이 적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 사고보다도 이 결정이 알려질 경우 아군부대 특히 한국군에게 미칠 영향을 보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즉, "철군지시는 하달 후 곧 알려질 것이 확실하며, 이는 한국군의 부분적인 붕괴를 초래하기 마련이며 이로써 유엔군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산교두보에 도달하여 실제 철군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곳을 확보할 능력을 대단히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한국정부와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채 극비에 부쳤던 것이다.[104] 그들은 철군 결정 시점을 전선이 금강선으로 남하할 때로 판단하였지만 부산교두보에 도착할 때까지는 철군을 위한 예비명령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Ⅳ. 맺음말-유엔의 지원과 성격

지금까지 신정공세 전후한 유엔의 휴전방안과 그에 대한 양측의 정책적 입장을 분석하였다. 유엔은 중공군 참전 직후부터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대표의 복귀로 인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고, 유엔 회원

104) 국방부 전편위(역), 앞의 책, p.328.

국들 중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었다. 특히 서방국가들은 유럽안보를 위해 유엔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유엔 참전국을 비롯한 많은 유엔회원국들은 미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와 조건에서 서유럽 국가들을 극동의 전쟁에 개입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입장은 전쟁을 확대하지 않고 한반도로 국지화하면서 미국의 군사작전을 충실히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유엔에서는 가장 먼저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랍 블록 13개국이 중재에 나서 중공과 북한에 38도선을 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38도선에서의 휴전에 관한 쌍방의 의사를 타진하였다. 이들은 유엔 폴란드 대표가 제안한 완충지대안과 미 제7함대의 타이완 해협에서 철수, 그리고 미국의 대만군사지원 중단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중국에 교섭의사를 타진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동의하였으나 중국과 북한은 강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작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중국은 유엔의 제안 이상으로 큰 정치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중국은 한국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 대만해협과 대만지역으로부터 미군 철수, 한국문제의 한국민족에 의한 해결, 중국대표의 유엔 참가와 장개석 정부의 유엔 탈퇴, 일본 평화협정 준비를 위한 4국 외상회의 등 서방국가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유엔의 조건을 거부했다.

유엔 내 아시아-아랍 블록은 중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공산 측을 이해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였다. 아시아-아랍 블록은 다시 한국의 휴전을 주선할 3인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총회에 제기하여 채택을 받았다. 유엔 3인위원회는 휴전조건에 관한 미국의 조건을 받아내었고, 이어 중국정부에게는 휴전이 이루어지면 정치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협력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적 목표를 더욱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유엔의 제안을 거부하고 38선을 넘어 공

격하는 신정공세를 진행시켰다.

3인위원회는 중공군이 38선을 넘어 공격하자, 이제 더 이상 평화안을 제기하는 것이 더 이상 무용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영국, 인도, 캐나다 등이 협상의 가능성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유엔 3인 위원회는 다시 중국의 요구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는 휴전 방안을 모색하여 5단계 평화방안을 마련하였다. 5단계 평화안은 한국전쟁의 즉각 휴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모색, 한국으로부터 군사력의 철수와 더불어 한국국민이 자신들의 정부에 관한 희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 마련, 한국의 통일 및 그곳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유지를 위한 잠정협정 체결, 극동문제, 대만의 지위, 중국의 유엔 대표권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영국·소련·중국 대표를 포함한 적절한 기구의 설치 등이었다.

이것은 극동문제 해결을 위해 영 연방국이 중심이 된 유엔 3인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를 최종적으로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정치문제를 포함하는 유엔의 5단계 평화안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최종적으로 이 제안마저 거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지도부가 유엔의 5단계 평화안을 거부한 것은 군사외교상 큰 실책이었다. 중국은 전쟁목표를 더욱 확대하여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했으나, 결국 이후 4, 5차 공세에서 크게 실패함으로써 불리한 입장에서 휴전협상을 수용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후 휴전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중공은 외교적인 측면에서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모두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실제 휴전협상이 개시될 때 그보다 훨씬 못한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신정공세 결과 미국은 철군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중공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정치적인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군 측은 미국의 반격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

세능력을 과대평가하였고, 그 결과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유리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중국은 유엔의 5단계 평화안을 거부한 후 미국이 반격작전을 개시함과 아울러 유엔총회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선언함으로서 정치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신정공세 전후시기 유엔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휴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중국의 대만 지위 문제나 유엔 가입 문제 논의 등 정치적 양보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전선의 상황과 양측 국내외 여론 등 모두를 고려한 결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국방부. 19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상), 1990,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hiefs of Staff, 1978.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1)(2), 신오성, 2002.

군사편찬연구소, 『중국의 한국전쟁사』(2), 신오성, 2003, 中國軍事科學院歷史硏究部, 『抗美援朝戰爭史』 제2卷, 군사과학출판사, 2000.

대한민국 정부기록보존소, 2002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 한국전쟁과 중국』(Ⅰ·Ⅱ), 신진기획.

박두복 외,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박명림, 「스탈린·모택동·팽덕회·김일성의 구상과 전략」 『전략연구』 제17호, 2000.

온창일, 「휴전을 둘러싼 한미관계」, 김철범(편), 『한국전쟁』, 평민사, 1989.

외무부(역), 『한국전쟁관련 소련외교문서』(1)(2)(3), 1994(미간행)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1974,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US Department of Army, USGPO, 1972.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중심, 2000.

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세경사, 1991.

정일형, 『유엔과 한국문제』, 신명문화사, 1961

하영선,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1990, 나남.

楊奎松, 2000 「중국의 조선출병시말」 『현대북한연구』 제3집, 2000.

景希珍·李太友, 1984 『跟隧彭總』, 遼寧人民出版社

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 1985『彭德懷元帥, 人民革命軍事博物館文獻資料選』, 上海人民出版社

軍事科學院, 1988『彭德懷軍事文選』, 中央文獻出版社

當代中國人物傳記叢書編輯部, 1999『彭德懷傳』, 當代中國出版社

宋梅, 1999『彭德懷軍旅生涯』(上,·下), 黃河出版社

彭德懷,『彭德懷自述』, 人民出版社.

楊鳳安·王天成, 2000『北緯38度線-彭德懷與朝鮮戰爭』, 北京 : 解放軍出版社

沈志華, 2001『中蘇領導人的政治考慮』, 世界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7『建國以來毛澤東文庫』 第4卷, 中央文獻出版社

沈志華(編), 2003『朝鮮戰爭 :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中·下), 臺北 : 中央研究院史料叢刊.

阪田恭代, 「米國の朝鮮戰爭休戰に關する基本方針の形成」, 軍事史學會編, 『軍事史學』通卷141號, 2000, 錦正社.

James Matray, *Truman's Plan for Victory: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the 38 Parallel Decisio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6, 1979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50*, Vol.Ⅵ-Ⅷ, USGPO, 1971.

The nature of UN support of the Korea War

Yang, Yong-J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Untied Nations' efforts for peace on Korean peninsular after CCF's participation in Korean War. The Untied Nation tried to negotiate th peace plan between two sides from the end of 1950.

Once the CCF's entry into the war had been confirmed, the war situation moved to a new phase, and the UN forces, which had guided the war in an effort to destroy the NKPA forces, and to punish North Korea, had to set up new guidelines to cope with the new situation. Accordingly, in late November, 1950, the UN forces camp, mainly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discussed various options, such as an expansion of the war up to the Chinese territory, a cease fire along the 38th Parallel, or a forced and inevitable evacuation.

The Korean delegation to the UN insisted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 should be achieved only by victory in the war. The Chinese intervention in the war is a Challenge to the UN in the same way as the North Korean invasion. The UN participation in the war was to repulse the invasion. With the same spirit we should drive back the Chinese Communists." The Korean delegation also emphasized to the friendly nations the political objective and will of unification, and that a cease fire at a threshold of unification might return us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MND

to the status quo ante bellum, and would be contrary to the Korean nation's desire.

At that time, particularly, the US strongly considered the employment of nuclear weapons as one of the new strategies to cope with the Chinese invasi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these casual remarks were realized almost at once. The British Prime Minister who had not wanted the expansion of war in the Far East, especially from the view point of the interest of NATO's security, visited Washington.
so the conference had a very important meaning for the UN forces' new strategy.

On the other hand, at the UN, on the 5th of December, the very day Truman and Attlee agreed to seek a cease-fire under UN auspices, a group of thirteen Asian and Arab states proposed to ask China and North Korea not to cross the 38th Parallel, and sounded out both sides about a cease fire along the 38th Parallel.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gave their assent, but China and North Korea gave no direct response. The CCF, who were securing the initiative of operation, were not agreeable with the proposal of the UN forces.

The Untied Nation has tried to negotiate th peace plan between two sides from the December of 1950 and January of 1951. The Untied Nations' has achieved great results to negotiate for the peace plan on Korean peninsular after CCF's participation in Korean War. It's the results considering both the operation situation and political opinions.

Key words: Untied Nations,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hina, Chinese intervention, UN Forces, Peace plan, Korean War, cease fire plan, the 38th Parallel, New strategy, Negotiation